

F1특별법 제발의 이달말 연기 왜

개최권료 등 관련 부처 사전 협의

기획재정·문화부 등 예산지원·사업 주관 조율

“국가 주도하기엔 상업성 강하다” ... 걸림돌로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1(포뮬러원)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발의가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과 민주당 유선호 의원 측에 따르면 애초 7월 말께 특별법을 제발 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상황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오는 8월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F1 특별법 제발의가 연기된 것은 상임위 행정 등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제발의를 해도 법안 통과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데다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농림식품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 관련 부처들과 더욱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법안 제발

의를 주도하고 있는 임태희 의원 측 관계자는 “제발의는 지금 당장 할 수도 있지만 발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발의를 해서 곧바로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권 상황과 정부 부처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 중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문화관광부는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이기 때문이다. 기타 부처는 법률 조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하는 수준에서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 게 임태희 의원의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임태희 의원과 유선호 의원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 측과 F1 대회의 성격과 개최권료 지원 문제, 특정 기업에 특혜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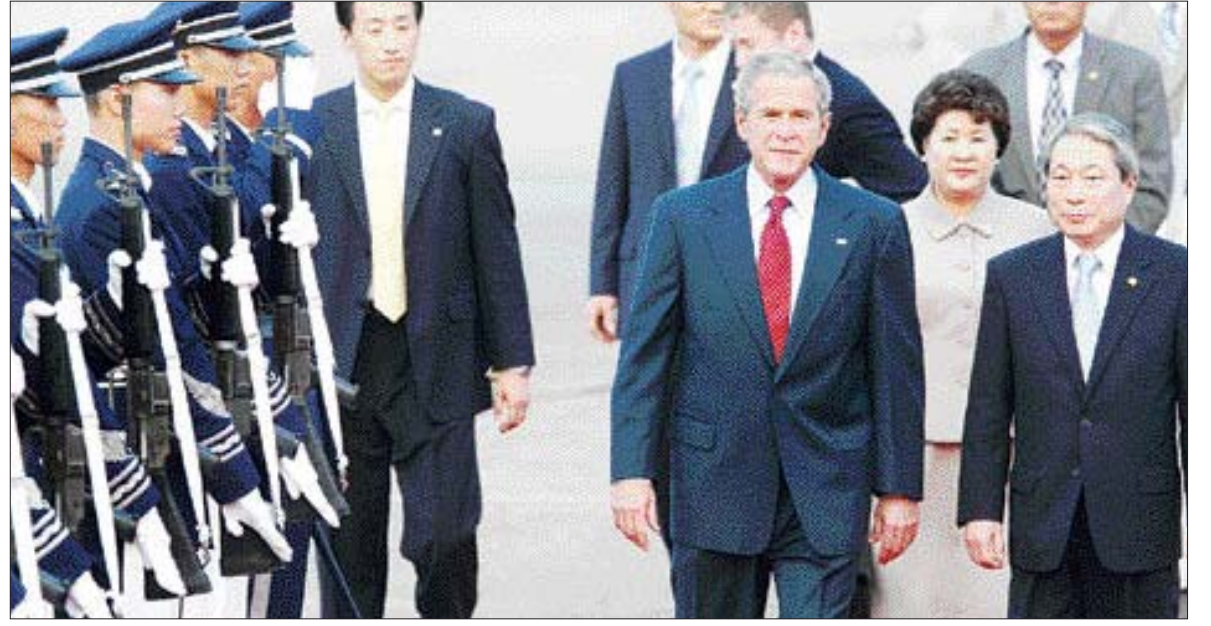
등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F1 대회가 국가가 주도하기에는 상업성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개최권료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관련 부처의 사전 이해가 수반되지 않고 지원법안이 제발의 된다 해도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발의 시기를 늦춰가며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F1 지원특별법 제발의 연기는 임 의원과 유선호 의원, 전남도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F1 대회 지원특별법은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6월30일부터 공동발의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호남 무소속 의원들의 서명은 유선호 의원 측에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한나라당 및 기타 정당은 임태희 의원이 담당하고 있다.

민주당 및 호남 무소속 의원 가운데 모두 38명이 서명했고 한나라당 및 기타 정당의 경우 40여 명 등 5일 현재까지 총 8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동맹·북핵·주한미군 주의제

■李大통령 - 부시 무슨 얘기 나누나
독도·아프간 파병도 거론 될 듯

6일 오전 개최되는 제3차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미 양국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은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 좀더 솔직하고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의 첫번째 의제는 한미동맹이 우선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고의 과동'으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미 간의 이상기류를 조기에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국의 공통된 시각이다.

부시 대통령이 최근 방한을 앞두고 미 지명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귀속 국가 표기를 바로 잡도록 직접 지시한 것도 한미동맹의 훼손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양 정상은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미 동맹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영유권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해선 미국 측도 '비극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 이어서 부시 대통령의 예상 밖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 신고서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비확산 3단계 논의 진임을 위한 한미간 공조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중단한 채 미국과의 소통에만 주력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양 정상은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연내 비준, 주한 미군 지위변경 및 군사력 유지, 방위비 분담(SMA) 제도 개선,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 항공우주분야 협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감대 내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간 인적교류와 관련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매년 최대 5천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18개월 간 미국에 머물면서 어학연수를 하고 인턴으로 취업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동북아 정세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협력 방안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내년 예산확보 총력전

市, 8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협조 당부
道, 12일 한나라와 간담회서 지원 건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 예산확보와 지역현안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체계 구축에 나서는데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8일 낮 12시 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박추선, 조영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는다.

시는 이 자리에서 시가 요청한 내년 국비예산 1조7천억원(146개 사업)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한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과 광엑스포 등 계속사업 예산 1조3천억원을 비롯해 국립도서관·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건립 등 신규사업 예산 4천억

원(55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시는 12일에는 광주·전남지역을 순회 방문하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이정현 의원 등 10여명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갖고 광주시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대통령 공약사업 등의 차질없는 이행을 요청하고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건의한다. 시는 우선 세계문화상품 단지 조성, 광주 첨단산단 R&D특구 지정 등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의 조기실현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세계 문화상품단지 조성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맞물려 광주시

아시아 문화상품의 유통거점으로 육성하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다. 또 광주 첨단산단 R&D특구지정은 전자, 광산업을 축으로 광주를 첨단산업도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 숙원사업이다.

전남도도 이날 오후 박희태 대표 등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 ▲무안공항 KTX노선 경우 ▲영산강 뱃길복원 지원 ▲동북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선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 지역 출신 여·야 의원은 물론 정부 각 부처와 다각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제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나주시의회 정상화
부의장·상임위원 1석 무소속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자리다툼으로 40여 일간 파행을 거듭해온 나주시의회가 5일 정상화됐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오후 인사회를 열어 정찬걸(무소속) 의원과 김종운(민주)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부의장과 행정자치위원장에 대한 투표 실시, 홍철식(무소속) 의원을 부의장에, 김양길(무소속)의원을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석 가운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무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게 돼 양측간 자리다툼이 일단락됐다.

앞서 나주시의회는 4일부터 의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정상화를 촉구해온 '시민대책위'에 ▲의회 파행에 대한 공개사과▲민주당-무소속 합의에 기초한 원구성 ▲7월분 의정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등을 약속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MB, '외교난맥 풀기' 숨가쁜 행보

오늘부터 美·中·호주 정상등과 잇단 회담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그야말로 숨가쁜 '외교행보'를 이어간다.

6일 열릴 예정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취임 후 3번째 정상회담을 비롯해 내주까지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알제리, 호주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이 잇따라 잡혀 있는 것. 이 대통령은 이번 연쇄 '정상외교' 무대를 통해 새 정부의 외교난맥상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외교 대통령'으로서의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해 실추한 리더십 회복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외교 릴레이의 첫 테이프는 6일 청와대에서 부시 대통령과 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그간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쌓은 우의를 토대로 한미동맹에서부터 북핵문제, 동북

아정세, 경제 등 실질협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뒤 그 결과를 공동성명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8일 중국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막식 참석 후 당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알제리 정상과, 다음날인 9일에는 중국, 카자흐스탄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11일 청와대에서 방한하는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연합뉴스